

# 광주·전남 행정통합 속도에 교육제도 ‘응답’



7일 오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광주시·시교육청 간담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시·시교육청, 교육혁신 담은 공동선언문 발표 추진협의체 교육청 참여…특별법안 교육현안 반영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혁신 방안 모색에 나섰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7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통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제정될 특별법안에 담길 교육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은 이날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서 (가

정)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이 시대적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광주·전남 대통합 성공과 교육혁신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전남 대통합에 적극 공감하고,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광주시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청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의 핵심 주제로 참여해 선진형 초·광역 통합 모델 구축에 힘을 보태고, 교육

분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안 작성과 검토과정에 앞장선다는 점을 명시했다.

양 기관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시교육청이 교육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즉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광주시에 전달하면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시도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의 안정적 운영 방안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고,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협의체’에 교육청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안

검토 및 작성 과정에도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지방소멸 문제와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대가 큰 만큼 행정통합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관련한 논의사항이 많은데, 광주시와 적극 협조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도민들의 관심이 컸다”며 “시의적절하게 교육청과 발을 맞추게 돼 감사하고, 행정통합이 시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광주시, 행정통합실무준비단 공식기구화

### 조직개편 단행…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도 신설

### 5·18민주화운동 50주년 준비 ‘추진기획단’ 출범

광주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무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총괄하는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지난 5일 출범한 임시조직인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공식 기구화 한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이 새롭게 설치된다.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은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협의체를 보좌하는 3급(국장급) 기구로, 산하에 통합기획과·통합지원과 등 2개 과, 4개 팀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행정통합 종합계획 수립과 특별법안 마련, 통합조직 설계 등 행정통합 전반을 총괄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를 신설해 민·군 통합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탄약고 부지 개발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총괄 추진한다. 본부 내에는 사업비 분석과 재정 계획 수립, 재원 확보를 전담하는 ‘사업재정팀’을 신설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재정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군공항 이전과 미래도시 조성을 연계한 종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획단’도 출범시켜 50주년 기념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획·조정한다. 기획단은 중앙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범시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제100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 연계 등 5·18의 역사적 의미 확장에도 힘을 기울인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는 ‘시스템통합팀’을 신설해 토목공사 이후 전기·통신·신호·선로 등 다양한 복합공정 간 기술적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완전자동 무인운전 시스템 구축과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정적 인 개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행정력도 보강한다.

건강위생과에 ‘자살예방팀’을 신설해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 정책을 추진하고, 돌봄·사회재난·도서관 분야 인력을 확충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서 인력도 보강해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병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군공항 이전 등 핵심 현안과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행정통합 추진 동력 확보와 미래도시 조성, 시민 안전 강화를 통해 ‘부강한 광주’의 지략할 수 있는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달 시행 목표로, 관련 자치법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진원 강진군수가 7일 강진아트홀에서 ‘강진만 횡단교량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 강진만 가로지른다…전남·강진, 횡단교량 건설 본격화

### 2.5km 교량에 1600억원 투입…국도 승격·재정 분담 공동 추진

전남도와 강진군이 강진만을 가로지르는 대형 교량 건설에 본격 착수했다. 오랜 지역 숙원 사업이 행정 협약을 계기로 실행 단계로 넘어가면서, 강진의 교통 지형과 생활권 구조에 의미 있는 변화가 예고된다.

전남도는 7일 강진아트홀에서 강진만 횡단교량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강진군과 공동 협약을 하고, 본격적

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진원 강진군수, 차영수 전남도의회 의원, 서순선 강진군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진만 횡단교량 건설사업’은 총연장 2.5km, 사업비 16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지난 2025년 9월 전남도 정책비전투어에서 강진군이 건의한 뒤 공

동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는 두 가지 추진 방안이 담겼다. 우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도 819호선을 국도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는 것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최우선 반영되도록 협력한다.

또한 지방도 건설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총사업비를 전남도 50%, 강진군 50%로 분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진만 횡단교량이 완공되면 강진만을 기준으로 나뉜 생활권이 통합되고, 관광과 물류 이동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주변 도로사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강진만 횡단교량은 강진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진군민의 교통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비 소방조직 통합 착수

### 전남소방본부, TF 구성…조직·재정·현장대응 점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소방조직도 통합을 전제로 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행정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고, 광역 차원의 소방행정 체계를 선제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전남도에 따르면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은 7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소방행정 통합 데스크포스(TF)’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흐름에 맞춰 소방 분야 전반을 점검하고, 통합 이후를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방행정통합 TF는 3명 규모로 구성되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비해 소방조직과 재정, 현장 대응체계,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광역 소방조직 모델을 설계하고, 통합 이후 인력 운영 전

략을 마련하는 한편 소방특별회계 운영 방식 변화에 따른 재정 구조와 영향도 분석할 계획이다.

통합 지방정부 출범에 따라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TF는 재원 조달 구조와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에도 집중한다.

특히 행정체계 변화 과정에서 도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 원칙을 명확히 하고, 출동 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남소방본부는 향후 제정될 행정통합 특별법에 소방 분야 관련 조항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 행정통합 추진기획단과 광주·전남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전남도, 중국에 해상풍력 등 전략산업 알렸다

### 유망 투자기업 대상 투자 환경·인센티브 등 설명

전남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연계한 산업통상부의 지자체 투자유치설명회가 지난 6일 베이징에서 열려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등 지역 전략산업을 소개하고 관심 기업과 개별 면담을 펼쳤다.

설명회에는 전국 광역시·도 중 전남도를 포함한 지자체 등 6개 기관이 참석해 중국 유망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투자환경과 전략산업을 소개했다.

전남도는 주요 산업단지와 외국인 투자유치 중점지역, 역점 투자유치 분야, 투자인센티브와 행정지원체계 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해상풍력, 신에너지,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등 전남도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아 일부 기



업과는 구체적인 투자 내용에 대한 개별 면담도 진행했다.

전남도는 이번 중국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중국 기업의 투자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한편,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백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삼성SDS 컨, 해남 AI컴퓨팅센터 부지 첫 방문

### 정부 사업 일정 차질…우선협상자 선정 시급

삼성SDS 컨소시엄이 국가 AI컴퓨팅센터 공도에 참여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해남에 위치한 센터 부지를 방문, ‘AI 고속도로’ 핵심 인프라를 살펴보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삼성SDS를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 전남도 등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 30명이 참여했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이나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고성능 연산 자원(GPU)을 기업이나 대학에 제공하는 시설로 사업비에 만 2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오는 2028년까지 GPU를 1만 5000장 이상 확보하고 2030년까지 지속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SDS는 지난해 10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사업에 단독 참여한 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데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SPC 설립 준비와 데이터센터 인허가, 사업 기획 등을 진행해왔다.

다만 사업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은 지난해 11월 기술·정책 평가를 통과한 이후 현재 금융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지난해 11~12월 중 금융 심사를 마무리하고 사업 참여자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우선협상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금융 심사와 우선협상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SPC 설립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